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송기민, 한양대 교수)

담 당 : 경실련 사회정책팀(남은경국장, 가민석간사 02-766-5625)

제 목 : [보도자료]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총 2매)

보도일자 : 2024. 02. 16.(금)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2. 16.(금)

<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시겠습니까?

-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가 지역 · 필수 · 공공의료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 오늘(16일)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위한 정견 질의서를 발송했다.
 - * 신동근위원장, 고영인간사, 강기윤간사, 강선우위원, 김민석위원, 김영주위원, 김원이위원, 남인순위원, 서영석위원, 신현영위원, 인재근위원, 전해숙위원, 정춘숙위원, 최혜영위원, 한정애위원, 김미애위원, 백종현위원, 서정숙위원, 이종성위원, 조명희위원, 최연숙위원, 최영희위원, 최재형위원, 강은미위원
-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수많은 의료위기를 마주하면서 대안으로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고,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배출하고 필요한 지역에 복무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발의와 폐기만을 거듭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20개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법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 이에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총 24명 의원 모두에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향후 답변 결과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 붙임 : 질의서 원문

2024년 2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원명

담당자

□ 배경

- 21대 국회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및 필수진료과 휴진, 코로나19 공공의료대란 등 수많은 의료위기를 겪었음.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개에 달하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각 한 개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함.
 -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 관련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수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되면 이번 회기에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됨. 최근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극심한 의사 부족 문제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새로 배출된 의사를 적절한 진료과와 지역에 배치할 근거를 함께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책효과를 보장할 수 없음.
- 최근 국민의힘도 지역의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향한 정치권의 공통된 약속이라 볼 수 있음.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고, 2월 18부터 가능해짐. 이에 대한 상임위 각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

□ 문항

※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과 관련한 총 2문항에 대한 각 입장에 “클릭(√표시)” 해주세요.

1. 2월 입시회에 「공공의대설치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다.

*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는 의과대학 신설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답변 이유 :

2. 2월 입시회에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다.

*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개설해 학생을 선발하여 국가가 양성·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답변 이유 :

※ 문의 및 회신처 : 경실련 사회정책팀 가민석간사 (010-4101-0206 / ka9202@ccej.or.kr)